

북한개발소식

2025 MAR

03

통권 233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디지털화와 그 시사점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6)

북한뉴스

트럼프, 미일회담서
북 완전 비핵화·대북 협상 의지 동시 확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디지털화와 그 시사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MAR

이달의 주제 :

북한의 디지털화와 그 시사점

- 권두칼럼 **01** 북한의 디지털화와 그 시사점
- 칼럼_1 **10** 최현규 _ 디지털화를 꿈꾸는 북한, 어디까지 왔나?
- 칼럼_2 **14** 강채연 _ 북한은 지금,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전체주의
- 칼럼_3 **20** 남바다 _ 북한의 디지털 인권과 감시 체계
- 탈북민 수기 **26** 김열매 성도 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6)
- 서평 **31**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 북한뉴스 **33** 트럼프, 미일회담서 북 완전 비핵화·대북 협상 의지 동시 확인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국제정세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외



폐쇄적인 체제 특성으로 인해 외부 세계의 발전상에 비해 뒤쳐진다고 평가받는 북한이지만, 근래 북한의 모습에서는 디지털 기술들이 폭넓게 확산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종 앱을 사용하고 금융과 상거래 부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이용되는 등 디지털화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의 공식 미디어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북한 평양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VOA)〉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문화, 여가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북한 주민들 개인의 행동 양식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관점은 이와는 다른 듯하다. 북한은 발전된 기술이 당국이 주창하는 자력갱생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경제적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할 뿐 아니라 통치를 안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디지털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의 북한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디지털화를 특별히 북한의 정책 방향성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디지털 정책 드라이브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보급대수가 600만대에 달하는 등 북한 사회에도 디지털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장마당의 활성화로 주요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기존의 미비한 유선 전화 인프라에 만족할 수 없었던 주민들에게 휴대폰이 필수품으로 자리하게 되었다.¹ 휴대전화라는 새로운 기술은 북한 장마당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 확대는 자연스럽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 증가 등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여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당국에게 디지털 기술은 놓칠 수 없는 유용한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당국이 강조하는 북한 경제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수자경제’이다. 여기서 ‘수자’는 숫자(數字), 즉 영어의 디지털(Digital) 또는 넘버(Number)를 옮긴 것으로서 ‘디지털 경제’와 같은 말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김정일 말기 대두된 과학기술중시노선인 ‘새 세기 산업혁명’을 이어받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길 주문해왔다. 그 일환으로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산업설비의 자동화를 뜻하는 ‘CNC화’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여 2019년부터 북한은 ‘수자경제’를 경제 정보화의 최신 추세로 강조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정보통신 분야 주요 기관인 체신성(통신 업무)과 전자공업성(IT 하드웨어 담당), 국가정보화국(정보화 사업 총괄)을 합쳐 ‘정보산업성’을 출범시켰다. 정보산업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²

‘수자경제’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듯 북한의 디지털 기술 도입의 중점 영역은 경제이다. 강채연(2024)은 북한의 디지털 정책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북한의 디지털화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했는데 각각 1) 경제의 하부구조, 즉 기업 정보화, 2) 금융 분야의 디지털화, 3) 교육분야의 디지털화이다.³ 기업과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기술 도입이 당국의 디지털화의 핵심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낙후된 산업을 극복하는 주요 방안으로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는 그 핵심으로 꼽힌다. 24년 3월, 북한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완수의 확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하며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째 과업을 반드시 단번 성공작으로 이루어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수자중시, 과학기술중시 정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자(디지털)중시는 당의 방침이라며 걱정만하는 패배주의에 빠져 현상유지하지 말고 적극적인 디지털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⁴

북한의 디지털 경제 정책의 방향성

북한 당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북한이 의도하는 디지털화는 단순한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섬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스마트폰 보급이나 공장 자동화 설비 증설 등 디지털 기술과 기기 사용을 넘어서 기업소 경영과 금융 시스템 전반에 통합적인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먼저 기업소 단위에서의 디지털화를 살펴보자. 북한은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CNC화를 강조하며 공업 생산 부문에서 자동화 도입을 적극 권장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8년 말에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리를 위한 ERP(전사적자원관리)와 MES(통합생산관리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에는 통합경영 정보체계 <대안 1.0>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이후로는 기업의 생산 및 자원 관리를 넘어 정부가 기업의 가용 자원과 목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앙에서 개별기업의 경영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장악, 조절, 통제하며 총화와 (행정)대책, 기업의 운명까지도 액세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⁵

금융 분야에서도 이러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송금 등 금융업무가 과거 돈주들의 사설 네트워크에서 공식 앱을 통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북한 당국 또한 월급을 카드로 지급하기 시작하는 등 주민들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금융정보망, 금융 보안체계, 전자결제 및 전자 인증 체계 등이 갖추어진 종합적인 금융정보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전국의 현금과 무현금의 분포, 국영 상업망과 지역 시장간 화폐 유통 정보, 전국 단위의 자원 유통량 통제 관리

1 北, 통제 속에서도 4명 중 1명이 휴대폰 사용...“이젠 사치품 아닌 필수품”, 동아일보 (2024.02.1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213/123490044/1>>

2 김정은이 ‘정보산업성’을 신설한 까닭?, 경향신문 (2022.02.06.), <<https://www.khan.co.kr/article/202202060819001>>

3 강채연 (2024),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4호(2024), PP. 17-21.

4 북한 “디지털 중시 안 하면 나라 망한다...디지털화 뒤떨어지면 기술의 노예 돼”, NK경제 (24.03.22.), <<https://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1>>

5 강채연 (2024), 앞의 글, p. 17.



〈북한 매체에 소개된 결제용 QR코드를 활용한 물품 구매〉

등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 구축, 여기에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 정보 장악 및 통제 시스템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금융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

북한 당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은 언뜻 보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할 때 기대하는, 경제부문에서의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의 디지털 도입의 이면을

살펴보면 경제 전반을 중앙에서 더욱 철저히 장악, 통제하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구현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그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추진하는 기업소의 경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도입은 단순히 해당 기업소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한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소들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장악,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원래 북한의 기업 운영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 기업소에 생산 목표와 물자를 하달하고 생산량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그동안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의 기업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기업소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왔다. 그렇지만 현재 개발 중인 이러한 경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업소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로 모이고, 이를 통해 중앙에서는 기업소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운용, 통제가 가능해진다면, 중앙의 각 기업소에 대한 지배력은 한층 증대된다.

금융 정보화 역시 금융의 편리함과 금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일반적인 개념과 북한의 초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당국은 금융정보화를 통해 자금순환구조의 회복과 이를 통한 통화가치 안정 및 대부원천 확보를 꾀하고 있다. 또한 ‘원에 의한 통제’ 등 국가의 관리·통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⁷ 북한에서 보급되고 있는 전자 결제는 당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현금수요를 억제하고 화폐 회전을 촉진하며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한다. 거기에 더해 전자결제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당국의 관리·통제 영역 밖에 있는 현금에 비해 자금이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쉬운 만큼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통화 공급량을 결정하거

나 기관·기업소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⁸

북한의 디지털 경제 정책의 한계

이상의 북한의 수자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당국의 장악력, 통제력 강화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종종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강력한 중앙의 경제정책을 통해 성과를 거두기도 하는 만큼, 북한의 경우도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디지털 정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북한의 디지털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인지 아니면 더 효과적인 장악과 통제인지 의문스러운 지점을 만나게 된다.

먼저 북한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북한의 디지털 정책은 아직까지 실제적인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과학기술이 실지 나라의 경제사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당대회에서는 그 미비한 성과의 원인을 그릇된 사상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등 ‘사람’에게서 찾았지만 강호진, 양문수(2024)는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았던 제8차 당대회의 결론에 의문을 표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는 산업 인프라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에서 혁신 수요가 창출되고, 이것이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동반 성장 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북한은 기존 산업 생산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관련 전력, 교통, 정보통신망 인프라 등이 미비하다. 해당 연구는 북한이 이러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정상화와 혁신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⁹ 일례로, 공장이 전력과 자원 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효율화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수자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악순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¹⁰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와 기업소 및 민간이 가지는 괴리도 한계로 꼽힌다. 강채연(2024)은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촉발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지역별, 세대별, 기업별 등으로 드러나는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와 개인의 자유와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 침해 문제 외에도 당국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과 현실성의

6 위의 글.

7 조현성 (2023),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자금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24권 제3호, pp. 195-220.

8 위의 글, p. 218.

9 강호진, 양문수 (2024), “북한 ‘수자경제’ 수준 평가와 특성”, 평화학연구 제25권 3호, p. 127.

10 위의 글, pp. 127-128.

문제를 지적했다. 당국이 추진하는 중앙집권화가 북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제 표준과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특히 기업의 디지털화가 정부의 투자가 사실상 결여된 자력갱생으로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력갱생의 비용에 떠밀린 채 강제된 계획이나 책임 회피에 더 바쁘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당국의 세수 확보와 정보통제에 활용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디지털 수용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개발에 있어서 중추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도 국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다양성과 참여가 형식적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었다.¹¹

북한의 디지털 정책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디지털 기술 자체보다는 당국의 방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북한 경제를 되돌아보면 고난의 행군을 기점으로 장마당으로 상징되는 시장 경제적 요소가 도입되면서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업소들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의 증대되었고, 외부세계와의 교역이 확대되고 지하자원 수출 외에도 의류 임가공을 비롯한 각종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시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그러나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제 성장의 흐름이 끊기고 양곡 판매소를 비롯한 국영 유통망 복원 시도 등 북한은 다시금 국가가 경제를 장악, 통제, 계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이 추진하는 디지털화 역시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감시의 도구로서 그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기대한 만큼 경제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악과 통제의 수단으로서의 기술

북한 당국의 디지털 정책을 통한 장악과 통제, 감시의 강화는 경제 부문 밖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먼저 북한은 주민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있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최소화하고자 한다. 2008년 3G 통신망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허가받지 않은 미디어를 접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노력해왔다. 여기에는 규제와 단속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먼저 북한의 휴대폰은 국제통화와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지 않으며, 와이파이가 기능도 통제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북한이 도입한 운영체제 ‘붉은 별’은 정부 승인이 없는 파일은 삭제하거나 열지 못하게 하는 전자 서명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당 운영체제에는 파일 중에 특정한 단어와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지 스캔하여 확인하고 포함했을 경우 제거하는 프로그램 및 사용자가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고 하면 시스템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는 등의 보안 프로그램이 상시 작동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모든 휴대전화에 사용자의 사용기록을 남기고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스크린 화면을 촬영, 저장하는 ‘열람 추적기 (Trace Viewer)’를 모든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불시에 적발된 가능성을 우려하게 하여 단속의 빌미를 스스로 검열, 제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¹²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주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북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4년 4월, 38North는 북한의 디지털 감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문과 안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증 시스템 개발 및 주민들의 생체 정보 수집, 학교와 일터를 포함한 CCTV 감시 카메라 보급 확대, 스마트폰에 기반한 각종 결제 앱과 시스템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 감시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¹³ 기존의 촘촘한 사회적 통제망에 더해 주민들의 생체 정보를 DB화하고 안면인식 기술과 CCTV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는 북한 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숙소에도 CCTV를 설치하고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추적 장치를 소유하게 하는 등 전자 감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¹⁴

북한의 디지털 감시 기술은 상당한 수준이다. 2018년에는 북한에서 안면

12 문희영 (2022), “북한의 디지털 인권 통제 메커니즘”, 북한학보 47집 1호 (2022), pp. 214-219.

13 Martyn Williams, Natalia Slaveney, “Digital Surveillance in North Korea - Moving Toward a Pan-opticon State”, 38North and the Stimson Center (2024 April).

14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숙소에도 CCTV”…디지털 감시 진화, 데일리NK (2025.02.10.), <<https://www.dailynk.com/20250210-1/>>

11 강채연(2024), 앞의 글, pp. 25-26.

디지털화를 꿈꾸는 북한, 어디까지 왔나?

최현규 (북한ICT연구회 회장)

최근 북한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북한 매체는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가 디지털 방식(수자식) 송전선 보호장치를 도입했다고 보도했다(로동신문, 2024.12.14). 또한, 개성시종합병원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위내시경을 개발했으며(민주조선, 2024.12.10.), 나남탄광에서는 디지털 온도표시 장치를 도입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과학원 융접연구소는 디지털 초음파 결함 탐지기를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다(로동신문, 2024.11.26). 이처럼 북한은 '수자식'을 현대화의 상징으로 삼고, 디지털 방식의 설비와 장치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강조해 왔으며, 2019년 이후에는 '수자 중시 사상' 혹은 '수자 중시 기풍'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수자 중시, 과학

기술 중시는 당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선전하며, "수자 중시는 사업에서의 성과를 위한 필수적 전제"라고 강조한다(민주조선, 2024.8.22). 여기서 '수자 중시'란 모든 사업을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과학적 원리와 법칙에 맞게 조직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즉, 모든 사업을 수자로 시작하고 수자로 마무리하며, 이를 통해 생산과 경영 활동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바라보는 디지털 경제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함께 창출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경제를 의미한다. 북한이 디지털화와 디지털 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경제의 정보화'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연구'지



〈24년 9월 18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열린 '전국정보통신과전람회-2024'〉. 북한 미디어는 이번 전람회에 480여개 단위에서 내놓은 1500여 건의 성과 자료와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 작성 경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경연과 발표회 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조선중앙TV)

(2020년 3월호)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경제 활성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태를 분석하고 전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에서 '수자 경제' 혹은 '수자화'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9년부터다. 이 시기 북한 매체들은 해외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수자 경제'에 대한 해설을 수록했다. 당시 북한은 '수자 경제'를 'Digital Economy'로 번역하며, "지금은 수자화 시대"라며 중국의 디지털 경제 사례를 적극 소개했다. 특히, '전국정보통신과전람회-2019'를 개최하면서 '수자 경제와 정보화 열풍'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디지털화 추진을 선언했다.

2024년 10월 말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조로정보기술제품전시회-2024〉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이동통신, 정보보안, 공업정보체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경제 관련 발표도 진행되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특히, 정보기술과 디지털 발전을 사회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북한의 디지털화 추진 사례

북한의 '수자 중시 정책'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수동으로 조작하던 낡은 운영 방식(아날로그)에서 벗어나 생산 공정을 디지털화하고, 정보화, 현대화, 자동화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는 '황금열매' 앱에 음성 인식 및 전자결제 서비스를 추가했으며, 상업 부문에서는 국가의 조절 통제력을 높이기 위한 상업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 및 전자결제 부문에서는 '전성카드', '나래카드' 등 북한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만물상'과 '옥류'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는 상업 부문의 디지털화 사례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QR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전자결제 카드와 연동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일부 백화점 등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의료서비스 부문에서는 '지능의료봉사체계'로 보건 현대화를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한다. 이 체계는 의료봉사과정에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 보관, 열람, 재이용할 수 있도록 병력기록의 표준화, 수자화하여 그 내용을 AI기술로 분석처리하여 의료 활동에 대한 최량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평양종합병원의 개원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했지만 병원 운영과 의료봉사의 지능화, 정보화를 위한 기초 작업은 이뤄졌을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도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 개발원 정보기술연구소가 개발한 과학기술행정 관리체계 ‘생명선 1.0’은 전국 규모에서 과학기술 행정을 디지털화, 표준화, 지능화한 시스템이다. 이는 북한이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디지털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화의 한계와 전망

그러나 북한의 디지털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유사한 개념으로 디지타이제이션(digitization)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있는데, 디지타이제이션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며,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 디지털 전환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과 비즈니스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종이 부족 문제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활용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 공정 최적화 수준은 여전히 낮다. 북한에

서 ‘디지털(수자)’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디지털 전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수자화(디지털화)"를 경제 발전과 국가 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현대화하고, 국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정보 통제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북한의 디지털 정책과 전략은 대체로 국가 주도형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산업 자동화와 함께 정보 통제 및 사이버 안보 강화라는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이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한다. 국제 제재로 인해 최신 기술의 유입이 제한되며, 정보통신 인프라와 전력 공급이 상시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려면 먼저 통신망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통신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물리시스템(CPS)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술력이 부족하다. 자력갱생 정책에 따



〈김일성종합대학 첨단연구소에서 개발한 얼굴인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출입 관리시스템 (사진=조선의오늘 유튜브)〉

라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 및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및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감시 시스템 및 정보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의 38노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휴대전화 감시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며,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북한 사회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정책적으로 디지털화, 정보화가 도약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교육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디지털화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의 수자화 사례를 소개해서 디지털화의 장점을 알게 하여 독려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일부 분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인프라 부족과 기술력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북한은 지금,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전체주의

강 채 연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들어가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남긴 충격은 아직 현재형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더하여 전염병과 같은 미래불확실성이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혁신적인 성장동력과 함께 인공지능시대를 가속화했다는 측면에서 놀랄만한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디지털시대의 인공지능 열풍을 직감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시대의 녹색전력과 인공지능시대의 디지털전력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두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어떨까? 전술(前述)한다면, 현재 북한에

서도 디지털 전환전략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여타 국가들의 디지털 대전환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오픈 인터넷이 아닌, 폐쇄된 인트라넷 환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김정은 지도부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은 기존의 낡고 원시적인 경제사회의 전반을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보화전략’으로 대중화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전략에 숨겨진 보다 중요한 통치전략의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디지털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전환정책과 전략,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디지털 관심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목표

북한이 디지털 기술개발을 확대하는 데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국제사회의 디지털(기술)동향이다. 특히 2016년에 스위스 다보

스포럼(세계경제포럼)에서 industry 4.0이 등장하는 배경에서 북한의 공식 매체나 학술 기사들에서는 AI, 빅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동향들이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9년 이후로는 AI와 관련한 선진국들의 기술 경쟁, 국가 AI 전략경쟁, AI 발전에 따른 투자 및 예산 증가, AI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국가 전략들에 주목한다. 나아가 국제 금융기관이나 유엔무역개발회의 등 국제 기구들에서의 디지털 논점들도 매우 자세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선진국 학습효과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국의 IT 발전 경험이나 동향이 압도적이다. 예컨대, 2008년 12월 북한은 중국의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산업표준 GSM플랫폼에서 WCDMA(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3G 모바일 네트워크(고려링크)를 출시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중국의 AI 11대 산업 전략이나(2015), AI 기술의 산업화 촉진, 2016-2030년까지의 단계적 AI 발전계획 및 세부 계획들까지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로 AI 기술 기반 확보나 인재 양성, 하부구조 건설, 시장 확대 등과 관련된 발전계획이나 전략들이다. 서방국들의 AI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북한의 디지털 인력들이 중국을 선두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과 AI 협력을 위한 다각도의 진출을 시도하게 되는 데,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국제 전문 학술지인 SCOUPS에 최소 161건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중국,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 걸쳐 최소 12개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서다. 사실 디지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적에 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러한 경험과 학습 결과는 국내의 디지털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디지털 전환 목표를 살펴보자. 북한은 2020년부터 디지털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필요성, 과제, 방도 등)을 제시한데 이어, 2021년에는 국가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정보산업성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이어 상품식별부호관리법(2021), 정보식별부호관리법(2021), 영수증법(2021), 전자결제법(2021, 2023년 개정), 상품유통법(2023)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들을 연이어 개정하거나 제정하게 된다. 또한 인민경제계획법(2021년 개정)을 비롯해 경제·사회 전반에서 관련법들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침을 법제화하기에 이른다. 2022년 11월부터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컨대, △생산·경영활동의 디지털화, △자료기지들의 디지털화, △경영활동 전반의 디지털화, △병원 디지털화, △산림과학 부문의 디지털화, △교육 분야의 디지털화, △공장의 디지털화, △체육 분야의 디지털화 등이다.

다음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의 통일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목표를 한번 살펴보자. ①정보획득: 국내외 선진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종합적인 장악·관리, ②정보 활용: 국가·기업소 전략 작성을 위한 정보활동 중심, ③정보 보급: 정보의 수집·분류·저장·가공·보급 등을 통한 다양한 업무 총괄 등이다. 사실상 경제의 하부구조에 대한 효율성, 통제, 관리 등에 초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목표로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별 경제 정보체계를 구축하되, 세부적으로는 계획 정보체계, 통계 정보체계, 전자 상업 봉사체계, 금융 정보체

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들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부구조의 정보화(경제단위 및 경제주체별 정보화 체계 구축문제), 기술개발과 선택적 도입,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법·제도 구축과 관련된 정책들을 우선으로 지속적인 보충과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북한 디지털화의 핵심 목표는 첫째, 경제사회 전반에서 통일적인 정보관리 및 중앙집권화된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둘째, 오랜 시장화와 정보화, 디지털 세계화에 매료된 북한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안보시스템(Digital Security System)을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셋째, 이 때문에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나 각종 경제사회 분야의 자료화를 넘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복합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된 철통같은 보안 시스템 구축이 매우 사활적인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

여기서는 북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그에 따른 디지털 기술개발 현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뤄본다. 경제 하부구조의 디지털화, 금융분야의 디지털화, 교육분야의 디지털화 등이다.

첫째, 경제의 하부구조, 즉 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기술개발 현황이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주로 지식경제 시대의 산업혁명이란 방침 하에 주요 공업 부문에서의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정책에 일부 디지털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2018년 이후로는 한국이나 선진국들에서 이미 표준화된 국제 자동화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utomation)의 표준 스마트 팩토리 모델(ISA-88, ISA-95, MES, ERP)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한다. 일례로, <전국정보화성과전람회>를 통해 처음으로 기업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사례가 등장했다. 이때 북한이 말하는 ERP는 기업자원의 계획화로 기업계획·자재·판매·회계의 지능적 관리를 의미하며, MES는 생산 지령, 공정별·작업별 일정 관리, 자재 보장·품질관리·절약형(에너지, 물, 노력) 생산관리를 포함하는 종합 프로그램체계이다. 201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경제정보연구소)에서 통합경영 정보체계 ‘대안 1.0’가 개발되고, 관련 교재와 참고서들을 발간·보급하는 등 인력 양성으로까지 확장된다. 2022년 이후로는 단순히 ERP체계나 MES체계를 넘어 외부(정부)의 강제(계획 및 생산지표)와 원격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의 최대 가용자원까지도 정부가 규정(지표별)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개별기업의 경영활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장악하고 조절 통제하며, 총화와 (행정) 대책, 기업의 실용성 여부까지도 엑세스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비자율적인 시스템을 꾀하고 있다.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도 로버스트(robust), 자동저장(모든 데이터의 주기적 자동저장), 접근제한(특별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만이 컴퓨터나 망, 응용프로그램, 자료 접속 허가·통제하는 기능), 자동 자료 교체(신규 데이터를 목적 파일에 자동 교체기록), 처리 이력 관리(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의 승인하에 처리하였는가), 보안대책수립비용 계산 등이 갖춰진 디지털 복합 보안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의 모든 자원과 인적·물적 정보를 보다 촘



〈북한의 전자카드 (사진=조선중앙TV)〉

촘하게 정부가 엑세스할 수 있는 디지털 전체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동 시점에서 확대되는 금융 분야에서의 디지털화와 관련 디지털 기술이다. 북한 금융 정보화의 목표는 △전국의 현금과 무현금 지역별 분포, △국영 상업망과 지역시장 간 화폐유통 정보, △전국 단위의 자원(물자) 유통량과 및 화폐유통 정보에 대한 실시간 통제·관리, △개별 기업들의 경영정보(화폐 사용 출처, 용도, 이익금, 국가 예산 납부 정형 등)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은행(전체) 간 실시간 감독체계, 교차 감독체계(실시간 감독 과정에 대한 이차 감독)도 주문하고 있다. 한마디로 화폐의 불법유통, 사장, 낭비와 같은 불법 통제에 더하여 이중 삼중의 기술적 감시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가 금융정보망, 금융 보안 체계, 전자결제·전자인증 체계 등이 갖춰진 종합적인 금융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금융 보안 체계에 있어서는 망 암호화, 강력한 방화벽에 이어 바이러스 검출 및 추적, 가상 전용망, 신분증인증, 반바이러스 기술과 같은 강도 높은 보안 기술들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전자인증체계에 있어서도 전자카드·Password·생체 정보가 적용된 사용자 신분 확인 기술을 강조한

다. 이미 북한은 COVID-19를 배경으로 이러한 보안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다. 전 사회적으로는 전자결제 체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기관기업소, 단체들에도 의무적으로 전자지불 체계를 도입(단말기 도입)하도록 규제한다거나, ATM기기 도입 확대, 전자카드의 의무 발급, 음식점 결제는 물론 자전거 대여, 대금결제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교육 분야에서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기술이다. 2016년부터 평양 시내 대학들과 주요 사범·교원대학들, 그리고 대도시의 초중고들에 VR, AR을 활용한 실험 실습 교육들이 시범 도입되는가 하면, 컴퓨터 기술, AI 등과 같은 과목들에서 교원들의 전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도 활성화했다. COVID-19 이전에 이미 △쌍방향 실시간 원격교육·강의실 감시체계·전자 출석시스템·강의 자동 녹화·원격교육홈페이지 등이 개발되었고, △실시간 강의 및 질의응답 체계·원격시험 체계를 갖춘 <붉은별 3.0> 웹 개발, △컴퓨터-휴대전화 화상회의·가상 화상 체계를 갖춘 <붉은별 4.0> 개발, △산업·의료·정보기술 등 다양한 교과들에 필요한 원격 강의안 개발 및 제작, △수



〈원격교육을 받는 평양시인쇄공장 노동자들 (사진=노동신문, 뉴스1 재인용)〉



〈북한의 붉은별 4.0 운영체제 (사진=NK경제)〉

천 명 실시간 영상회의·공장기업소 통신대학생 실시간 원격교육·보건부문 실시간 원격진단 및 치료 기능을 포함하는 대규모 원격 시스템 개발이 추진된 바 있다. COVID-19 이후로는 △교수-학생 간 대화 형식의 강의편집물 제작, △농촌-산간 지역 교원·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프로그램 개발, △국가망과 교내망을 이용한 실시간 참여프로그램 개발, △자제 영상 제작 가능 프로그램 개발과 같이 원격교육에 필수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도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보안 및 암호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고 복합적인 추적, 감시, 인증과 같은 제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개발되어 원격교육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들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문제는 2중 3중의 보안관련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부문별·경제 단위별 자원 및 정보관리, 행정관리 등을 위한 종합 감시 및 보안 시스템 개발, 정보통신기기의 추적 및 감시·관리·보안, 금융·교육·자료 기지들의 보안 등에서 이미 우수한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에 국가과학원에서 개발된 ‘붉은별 운영체제(OS) 4.0’기반 행정업무 통합시스템은 행정업무

+종업원 관리+문건 심의+출퇴근+CCTV+화상회의 등이 가능하다. 2025년 현재 대도시를 기준으로 기관, 기업소, 학교 및 공공기관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기의 확대에 따른 지문, 얼굴, 생체보안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음성, 문자, 문서 파일 인식 및 추적, 감시 프로그램들, 발명, 저작권, 품질 등 관련 보안 프로그램들도 강력하게 개발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사람들 사이는 물론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식별 가능한 컴퓨터망 보안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주민통제, 정보통제, 네트워크 통제가 일상천리로 이뤄지고 있다.

결론: 디지털 전체주의는 유효한가?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전반적 사회경제 생태계의 변화 그 반대편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적지 않은 문제들을 촉발한다.

첫째, 북한의 디지털 기술개발과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경제사회 곳곳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관리, 나아가 인권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2023년에 개발되고 평양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중인 전자감시 네트워크 시스템은 한류 콘텐츠나 외부정보의 유입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차단하는데, 현재까지 약 15,000건의 불법 콘텐츠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망’ 인트라넷에 도입된 AI기반 트래픽 분석체계는 VPN이나 위성 인터넷 접속시도를 99%이상의 정확도로 탐지함으로써 2023년 한 해에도 약 5,000여건의 불법 인터넷 접속시도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통합 통신

감시 시스템은 주민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등 AI주민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둘째,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기업별, 대학·학교별 등으로 드러나는 일련의 디지털 불평등(인프라, 접근성, 다양성, 자율성, 기술격차 등)의 문제다. 일부 제한된 지역이나 기업, 계층만이 다양한 디지털 시스템이나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고 있고,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혜택은 극소수에 국한되어 있다.

셋째, 당국의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효성과 현실성에 관한 문제다. 예컨대, 기업의 디지털화, 즉 개별 기업들의 자원이나 능력에 따른 문제들(인프라, 호환성, 접근성)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력갱생의 비용에 떠밀린 채 강제된 계획이나 책임회피에 더 바쁘다. 바로 디지털 자력갱생, 즉 정부의 투자가 결여된 사실상의 민간투자(기업의 자립)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장선상에서 북한당국의 이해관계와 디지털 수용자들 간의 이해충돌이다. 북한당국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해 시장화 이후로 만연해진 불법 차단과 투명성제고, 통일적인 경제관리, 시장질서 확립 등에 있어 필수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은 디지털 전환 정책을 통해 시장을 포섭하는 보다 촘촘하고 기술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교환, 정보서비스, 다양한 플랫폼과 앱 제공, 응용프로그램 및 보안 서비스 비용에 이르기까지 중추 복합적인 자원 수단을 덤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는 분명 디지털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정보 통제에 활용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른바 당국-수용자들 간 근본적인 이해충돌 문제다.

다섯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주로 정보 수집, 보안, 차단, 통제, 관리에 더 많은 디지털 기술이 할애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자유, 인권과 평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침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디지털정책이 △가상 세계에서의 광범위한 사생활 보호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적 및 공적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교육 기회의 불평등 등과 같은 구조적 불평등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대, 시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철저한 내부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갖는 중요한 한계를 드러낸다. 결국 아날로그 시대의 전체주의가 디지털 시대의 전체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의 김정은 체제다. 🐟

북한의 디지털 인권과 감시 체계

남 바 다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사무국장)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로서 정보 접근성 향상, 경제 발전,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기술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 보호를 촉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만, 북한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디지털화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승인한 내부 인트라넷 '광명'만을 허용하고, 스마트폰에 감시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등 철저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반 주민의 인터넷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국가로, 극소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내부 통제를 넘어 외부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하고 있다. 인

권 단체, 탈북민,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피싱, 랜섬웨어 공격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권리는 이미 기본적인 인권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례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권 침해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기술과 인권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한다.

디지털 인권 침해의 시대적 확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정보 접근성과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전통적 인권 침해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핵심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물리적 공간의 인권 침해가 디지털 영역으로 이전되었다. 표현의 자유 억압,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와 통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대규모 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제공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 고유의 새로운 인권 침해 유형이 등장했다.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한 행동 예측, 알고리즘 기반의 차별, 디지털 신원 도용 등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은 기존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셋째,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 방식이 고도화되었다.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선별적 정보 통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디지털 통제를 실행하고 있다. 전 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 감시 시스템을 의무 탑재하는 방식은 디지털 통제의 최종 단계를 보여준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들의 디지털 통제는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제한적 인터넷 접근을 허용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검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전 국민의 인터넷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디지털 기기에 감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극단적 통제를 실행하고 있다. 북한의 디지털 기기는 네트워크 연결 이전부터 감시 도구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정부 승인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러한 디지털 인권 침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디지털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이



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극단적 통제를 실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기술은 인권 보호와 침해의 양면성을 지닌다. 같은 기술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권 증진의 도구가 될 수도,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제적 흐름 속의 디지털 인권

디지털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적 권리가 아닌 기본적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보 접근권, 온라인 표현의 자유, 디지털 프라이버시는 21세기의 핵심적 인권 요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는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다.

유엔의 '2030 Digital Roadmap'은 디지털 권

리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약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디지털 접근성의 보편적 보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불평등 완화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포용을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나 배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유엔과 국제사회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을 통해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과 온라인 감시에 대한 국제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약은 개별 국가의 사이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국가 간 디지털 공격을 규제하고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역별 대응에서는 특히 유럽연합의 노력이 주목할 만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디지털 권리 보호를 위한 선도적 법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법제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디지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 법제 도입의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는 특수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전면적 인터넷 차단, 체계적인 디지털 감시, 정보 통제 등을 통해 국제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사례는 디지털 인권 보호를 위한 기존 국제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 규범이 개방된 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어, 폐쇄적 체제에 대한 효과적 개입이 어렵다는 점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 체제에서의 디지털 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제재나 압박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인권 침해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더욱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 사례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는 내부 통제와 외부 공격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디지털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대신 국가 통제하의 내부 인트라넷 '광명'만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디지털 기기에는 정부 승인 소프트웨어와 감시 프로그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모든 디지털 활동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반체제적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하고, 개인 간 통신을 검열하는 등 감시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IT 인력들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는 특별 교육을 통해 양성한 IT 인재들을 해킹 조직에 강제 배속하거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 벌이에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성통만사 발간 북한의 디지털인권 보고서 표지〉

신분으로 해외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수익의 대부분(90~95%)을 국가에 상납해야 한다. 이러한 수익은 북한의 핵 개발과 군사 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부를 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더욱 조직적이고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해킹과 피싱을 통한 정보 탈취는 탈북민 단체와 인권 활동가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이나 2022년 가상화폐 플랫폼 공격과 같은 금융 범죄를 통해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으며, 개인 활동가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손실을 넘어선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 속에서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경

험하며, 일부는 활동 중단을 강요받기도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운동의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디지털 인권 침해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정교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와 외부로 향한 사이버 공격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적 대비태세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AI가 강화하는 북한의 디지털 독재와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사이버 보안 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AI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AI 기술을 기존의 사이버 공격 기법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의 해커 조직들은 AI를 활용하여 피싱 공격의 정교함을 한층 높이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대상자의 온라인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공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기존의 단순 스팸 공격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금융기관, 정부기관,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공격에서는 AI가 생성한 정교한 위장 이메일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해킹 시스템의 발전이다. 북한은 AI 기반의 취약점 탐



색 도구를 개발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보안 시스템의 대응을 분석하고 우회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정보 수집과 시스템 장악이 가능해져, 기존의 탐지 체계로는 발견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되고 있다.

AI는 북한의 정보전과 심리전에도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다. 심층 학습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은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여, 탈북민과 인권 활동가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AI로 생성된 허위 정보는 기존의 선전 선동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제작되어, 정치적 혼란을 조성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AI 기반 사이버 위협의 증가는 국제사회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각국은 AI를 활용한 해킹 탐지 및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

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국가 주도의 사이버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AI 시대의 도래는 사이버 보안과 인권 보호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북한의 AI 활용 사이버 공격은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응 능력 향상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국제적 규범 확립이 필요하다.

북한의 디지털 감시를 막기 위한 국제적 대응 방안

북한의 디지털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공조가 핵심적이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디지털 통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인권이사회를 통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지원도 시급하다. 라디오 방송과 암호화된 USB 배포, 검열 우회 기술 보급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 특히 금융 범죄 차단을 위해 국제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IT 인력 착취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기업들의 북한 IT 인력 고용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 IT

인력의 탈북을 지원하고, 안전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과 인권의 교차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례는 이러한 기술이 전체주의 체제 강화와 인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교한 감시와 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인권 침해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이슈라는 점이다. 사이버 공격과 정보 차단이 국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셋째,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인권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권 보호 메커니즘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북한의 디지털 인권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사안이 아닌, 디지털 시대 인권 보호의 시금석이다. 국제사회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6)

김 열 매 성도

“절대 거짓으로 속여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누가 정치범인 딸과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겠니?”

두 개의 상반된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저는 이모부와 외삼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절대 거짓말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시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모부와 외삼촌께서 갖은 노력으로 저의 신랑감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어느 날, 이모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야, 오늘 남자 한명 찾아 올 거야.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2시쯤 되었을까요. 처음 보는 청년 2명이 이모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이모부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이 방을 나오자 저를 발견하고는 대놓고 보지는 못하지만 흘금흘금 살펴보는 눈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명의 청년과 그날 저녁부터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안에서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모

부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장○○, 알아보니 너희도 평양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 너희 집도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우리도 너희 집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너라는 사람만 볼 거니까 너희도 우리 조카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사람만 보고 서로 좋으면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에 그 청년도 좋다하여 교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복무 13년을 마치고 금방 대학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에서 모든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청년동맹 비서’ 직을 맡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학교일정이 끝나면 저를 찾아왔고 짧은 대화들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누이와 함께 이모부 집을 방문 했습니다. 누이와 함께 이모부를 뵙고는 아무래도 저와의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반대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북쪽 지역 사람들이 강하고 세다는 지역상의 특징이 있는데 그의 부모님께서는 그런 지역에서 온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제를 끝내버리게 되었지만 외삼촌께서 이번에는 의사직업을 가진 사람

을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보다는 해야 한다는 의무로서의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상관없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고향에 있던 큰외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내가 없어진 것을 눈치 채버려서 그곳이 발각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감옥에 쳐 넣겠다고 한다는 말을 들으니 두려워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께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이모부는 저를 말리셨습니다. 이모부는 “열매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곧 결혼해서 결혼 서류를 들고 가면 다들 어떻게 하지 못한다. 좀만 참아라.”라고 하셨지만 두려움에 스스로 궁지에 몰린 저에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저희 이모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로 저를 차버린 그때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모부를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학교 강의를 마치고 나면 밤에 부모님 집에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고 올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떠나고 이모부는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이모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번 싫다고 한 사람을 다시 받아주겠냐며 반대했습니다. 이모가 외출을 하자 이모부는 “그 청년 같은 사람을 어디 가서 다시 만나기 힘들다”며 내일까지 기다려보자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날 그 청년은 본인이 말한 대로 학교일정이 끝나자마자 오십 리를 걸어서 부모님 집에 다녀왔

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게다가 평탄한 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고개고개를 넘어서 험악한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산을 넘으면 또 강이 나왔습니다. 워낙 깊고 넓은 강이라 본래 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강이었는데 비가 퍼붓다보니 강물이 넘쳐 배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헤엄쳐서 그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11월에 겨울 솜으로 된 군복과 군화를 신고 비를 쫓딱 맞고 강을 헤엄쳐서 집에 도착한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강을 건너면서 빗물에 쓸려 내려가 죽는 줄 알았다며 그때의 아슬아슬함과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새벽 한시에 그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오는 막내아들을 본 부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반대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두 분께서 결혼을 승낙해주셨습니다. 허락을 받자마자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지도 않고 곧바로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하루 종일 젖은 군복을 입고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약속대로 저녁에 이모부를 만나러 온 그는 여전히도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 온 그와 저는 12월 동지 날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학생 신분으로 별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 온 토끼 가죽이나 금속 같은 것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한 끼 한 끼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차린 후



〈2011년 해주의 한 탁아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북한 어린이의 모습.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턱이 뾰족한 얼굴 모습이 눈길을 끈다. (VOA, 독일 구호단체 '갑 아나무르' 제공)〉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등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등록지는 그때까지도 함경북도로 되어 있어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 할 경우 진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가 불러오니 임신이 되었구나 했고, 배가 아파오니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나보다 했습니다. 새 생명이 뱃속에 있으니 배고픔은 더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변변치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저를 반겨주지 않으시고 저희 가족을 외면하셨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께서만이 간간히 들여다 봐 주셨지만 우리 가족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일도 모르고 해산했으니 이후의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모께서 쌀 10kg과 꿀 한 병, 계란 20알 정도를 사주셔서 남편과 며칠 동안의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쌀이 떨어지고 나니 먹을 것이 없어 옥수수쌀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옥수수 밥 한 그릇을 하루에 세 번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갓난쟁이를 먹일 모유가 제대로 나올 리 없었기에 한참 모유를 먹으며 자

라야 하는 아이도 먹지 못해 하루 종일 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그저 아이를 두 손에 받쳐 들고는 같이 우는 것 밖에는 할 수 없던 암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24시간 내내 울어재끼던 아기가 어느 날 밤에는 조용히 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가 조용하니 그동안의 피로가 쌓여있던 저도 아이 곁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만의 깊은 잠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잠에 빠져있던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아직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이었다면 아기가 깊이 자나보다 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며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던 아이가 몇 시간을 내리 자고 있으니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흔들며 불러보았지만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불러도 눈을 뜨지 않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며 아이에게 모유를 쥐어줬다는 일념으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가슴을 쥐어짖습니다. 모유 한 방울이 간신히 아이 입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자그마한 입 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는 “깹, 깹” 하며 여러 번 힘든 숨을 토하더니 순간 눈이 하얀색으로 뒤덮이며 새파랗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저는 곧바로 아이를 안고 일어나 옆집 사는 이웃언니 집 마당으로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우리 아이가 죽으려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언니와 아저씨가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이를 그 집 방에 눕히고 동네에서 옹한 할머니

를 데리러 나가셨습니다. 몇 분 뒤에 할머니가 오셔서 아이의 코 밑을 바늘로 세 번 정도 찌르면서 의식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찔러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이의 작은 미동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죽인 채 아이를 바라봤지만 아이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이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담요에 아이를 싸서 얼굴만 내놓고는 작은 몸을 끈으로 묶으셨습니다. 숨이 떨어지면 묻어야 하니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담요에 싸인 아기가 그리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비쩍 마른 몸으로 비참하게 울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이모부의 기업소 사람들이 삼을 들고 아이의 숨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방을 나갔습니다. 방에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아기와 저 그리고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고 오더니 저에게 안겨주면서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다시 한 번 모유를 먹여보라고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다시 모유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아이 입에 모유가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번처럼 꺾꺾대며 토해내지 않을까 무서웠지만 이거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식도 미동도 없던 아이의 목구멍으로 자연스럽게 고인 모유가 흘러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죽은 듯 고요한 아이의 뱃속으로, 숨길이 막혀 꺾꺾대지도 않고 말입

니다. 그렇게 3-4시간정도가 지나자 남편이 아이의 얼굴에 손을 대 보더니 온기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손을 대보니 정말로 얼음장 같이 차가웠던 피부가 따스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시장에 가면 유엔에서 들어오는 분유가 있다는 말을 해주어서 이모부가 남편에게 분유를 사오라고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온 분유를 먹고 아이는 기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아이에게 전해줄 때면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 먹을 것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고,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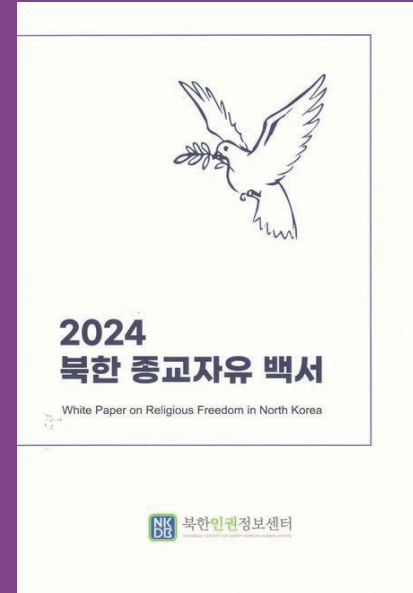
하지만 그렇게 숨을 돌린 것도 잠시, 먹지 못하던 아이가 분유를 먹으니 소화기능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아이는 마치 구호단체 사진에서 보던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배만 뽕뽕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 머릿속이 캄캄해지며 그저 “하나님, 하나님”만 외치며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아이를 들쳐 업고 한 병원에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업을 포대기조차 없어서 처녀 때 입고 다니던 솜옷에 싸서 안고 병원으로 간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내 차례는 오지 않고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지만 그저 아이를 보며 슬피 울며 의사선생님께서 불러주시길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난 후 우리만 남게 되자 그제야 소아과 원장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라 하시고는 “다 죽게 된 아이를

데리고 왔네” 라고 한마디를 하고는 창자가 들어 다보일 정도로 팔랑팔랑해진 아이의 배를 몇 번 눌러보더니 간호사에게 어떤 어떤 약을 처방해줄라 하시고는 나가버렸습니다. 21-22살 정도 돼 보이는 여 간호사가 의사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니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집이 어디 나요?” 그래서 저는 XX읍 어느 쪽에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아주머니, 여기 사람이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북쪽 말씨를 쓰는 저를 알아보고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 간호사는 다시 저에게 “아주머니, 혹시 아이 주사약 살 돈은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사야하는지 알려만 주시면 얼마든지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간호사는 자신이 그 달에는 매일 점심 이 시간에 나와서 근무하는데, 알려주는 곳에 가서 주사약을 사오면 자신이 아이에게 주사를 놓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맙게도 그분은 매일 아이 이마에 혈관을 찾아 포도당 주사를 놓아주었고 그렇게 10일 정도가 지나자 창백해져 있던 아이의 얼굴에 따뜻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으면서 점차 건강을 되찾아 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철렁하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 배고픔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으셨고 때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신실하

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이고 넘긴 아가는 어느덧 장성하여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흰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저 자: 양수영 외
출판사: 북한인권정보센터
발행일: 2025.01.14.
가 격: 20,000원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보고서가 바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북한 종교자유백서’이다. 백서 형식으로 발행되는 이 보고서는 매년 하나원을 방문하여 직접 탈북민들을 만나고 종교 박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였고, 이를 그 해의 백서에 반영해왔다. 오랜 기간 이러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북한 종교자유백서는 1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응답한 방대한 자료를 담은 보고서로서 북한의 종교 박해를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 종교박해 사건 수는 2,045건이나 되는데, 이 중 목적과 경험에 의해 기록된 사건 비율은 47.1%(2020년 61.1%), 간접적인 청취에 의한 비율은 52.9%(2020년 38.8%)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렇게 귀중한 연구를 진행해오던 북한종교자유백서이지만 2020년 이후로 발간이 중단이 되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하나원 조사를 불허하면서 조사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2023년 초부터 다시금 하나원 조사가 재개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4년 만에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가 출간되었다. 이번 북한종교자유백서에는 4년만에 발간되는 만큼 24년 입국자 123명을 포함해 20년 이후 입국자 283명의 응답이 포함되는 등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이 중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탈북을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 탈북한 33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2020년 이후에 발생한 종교물품 소지로 인한 2건의 사례도 수집되었다고 한다.

북한종교자유백서가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북한의 종교 박해의 과반이 넘는 사례가 기독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직접 소개하는 종교 박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부 미신 활동 등에 따른 박해도 있지만 주로 성경책 소지나 선교사 접촉, 예배나 기도생활의 적발 등 기독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힌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2024북한종교자유백서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동안 제정된 ‘3대 악법’을 비롯하여 강화된 북-중 국경 통제로 탈북 뿐 아니라 성경 같은 종교적 자료를 포함한 물품의 밀수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서는 지속적인 북한 종교 자유 모니터링, 북한에 종교 유포시 강화된 통제로 인한 안전에의 유의, 제 3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 자유 보호, 북한의 종교박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 등을 제언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지만 정보가 폐쇄적인 북한이다보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박해 사례의 확인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일선 선교 단체 입장에서도 성도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함부로 관련 사건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인 기독교 박해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서 이를 알릴 적절한 자료와 연구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랜 기간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열악함을 알려온 해당 보고서의 재출간이 못내 반갑다. 아무쪼록 기독교를 포함한 북한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 상황이 꾸준히 연구되고 알려져서 북한의 가시적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

트럼프, 미일회담서 북 완전 비핵화·대북 협상 의지 동시 확인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반도 안보 공약,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열개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나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면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내가 집권 1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 확보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시바 총리가 “일본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헌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고, 전쟁을 막았다”며 북한 및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 관계를 맺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거기서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 문제(북한 비핵화)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일본과 한국 등 파트너들과 계속 보조를 맞출 것(remain in lockstep)”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 발언과 고위 당국자의 언급은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의 '바'를 낮추거나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의 조율을 생략하는 등의 '과속'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라인 인선을 마치고 대북정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기까지는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인 만큼 이날 천명한 원칙이 유지될 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 재확인’에 반발하여 IC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중대 도발을 통해 ‘판 흔들기’를 시도할지 여부에 주목된다. (참고: 연합뉴스, 2월 8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비핵화 명시’ 공동성명… 북한 “핵무력 노선 견지”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월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월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과 북핵 문제 대응, 지역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북

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3국 장관들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하면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다”며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자리에서도 재확인됐다. 한미 외교장관은 향후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기로 했고 북러의 군사협력과 관련한 공조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2월 1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하며 “앞으로도 국가수반이 천명한 새로운 핵무력 강화노선을 일관하게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유아시아방송, 2월 17일) 

북한군 포로 “한국가고 싶다”… 정부 “수용 원칙하에 지원”



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씨가 2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질문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며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 참여 사실을 알게 됐고 1월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턱과 팔을 심하게 다친 리씨는 무인기와 포 사격으로 파병 온 부대 전우가 거의 다 희생됐다고 밝혔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리씨는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북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쪽 친척들을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이라며 제대 후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이 꿈을 이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2월 19일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 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2월 21일(현지시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체르냐크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포로들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압박해 포로들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설 경우 송환 문제가 난관에 빠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북중관계 풀리나... 양국간 우호 메시지 교환과 관광 재개 움직임 포착



〈2월 8일 평양에서 만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왼쪽)과 왕야전 중국대사〉

중국에 있는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2월 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5년 만에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월 18일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베이징 소재 여행사 '즈싱허이'는 2월 24일 출발해 3박4일 동안 북한 라선시를 관광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여행사는 “2025년 조선 해외여행 일정이 곧 정식 개방된다는 점을 정식 통지받았다”며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여행객에 관광을 개방하는 것이고, 첫 시범 개방 지역은 라선특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사 관계자는 “등록만 하면 갈 수 있지만 인원수가 제한돼있고 다 차면 못 간다”며 “(갈 수 있는 사람이) 10여명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행사는 북한 비자가 별도 종이에 인쇄돼 여권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아닌 외국 여권 소지자는 추가 비자 비용을 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 실행에 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귀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중국은 일관되게 중조(중북) 영역별 교류·협력에 적극적인(‘긍정적인’의 의미도 갖고 있음) 태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개별 여행사가 발표한 소식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닫아 걸었던 북한은 최근 러시아를 시작으로 제한적 관광을 허가하며 국경 개방 관측을 낳았다.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2월 13일 자사 관계자들이 라선시를 사전 답사했고 2월 20일부터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러 관계 밀착 속에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관측을 낳은 바 있었던 북중 관계이지만, 새해 들어 관광 재개 움직임을 비롯해 개선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왕야전 주북 중국 대사는 2월 3일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평양지하철 부흥역을 방문해 “평양지하철은 중국 여행객이 북한 여행을 올 때 들르는 중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며 “미래에 더 많은 중국 여행객이 평양 지하철에 와 둘러보고 그 깊이와 편리성, 질서를 느껴 양국 인민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대사관은 왕 대사가 2월 5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을 직접 배웅한 모습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도 2월 19일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중국대사관에 보내 우호 관계 강화 메시지를 발신했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8, 19일)

김정은, 화성지구 4단계 착공식 연설... “낙후한 평양 교외지역 일신”



〈지난 2월 16일 열린 화성지구 4단계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16일 열린 화성지구 4단계 착공식에서 평양 도시개발을 동쪽으로 확대하는 구상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화성지구 건설을 결속하고 다음단계로서 강동 방향으로 평양시 거리형성을 확장할 데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양시 외곽의 강동군은 대동강의 동쪽 편에 있다. 그는 이어 “선교구역 등 메동지구, 모란봉구역 월향동지구, 형제산구역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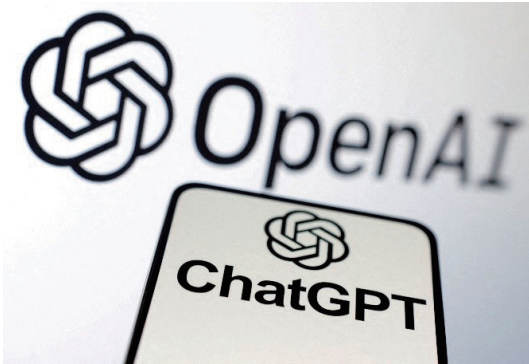
당동지구를 비롯한 수도권내의 낙후한 지역들과 교외의 낡고 뒤떨어진 생활문화지역들을 개변”하여 “수도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모두 정리하고 일신”시키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구상을 노동당 9차대회에 보고하고 차기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인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화성지구 5만세대 건설 사업의 성과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 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1년 송신·송화지구, 2022~2024년 화성지구 1~3단계 공사를 진행해 화성지구 2단계까지는 완공했다. 화성지구 3단계는 마감공사가 진행중이다.

주택 건설 사업은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정량적 목표가 제시된 분야다. (참고: 연합뉴스, 2월 17일)

북, 챗GPT로 가짜이력서 작성해 위장취업 시도… 오픈AI, “관련 계정 삭제”



미국과 유럽 등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 생성 등에 챗GPT를 이용한 북한 계정이 발각됐다.

오픈AI는 악의적 목적으로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를 사용한 북한 관련 계정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고 2월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은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오픈AI의 AI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이력서와 프로필은 서구 기업을 속여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다만, 삭제한 계정 수와 이들 계

정을 언제 삭제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북한은 서방의 첨단 기술을 빼돌리거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들은 이전부터 링크트인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사이버 보안 및 가상화폐 기업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아 민감한 정보나 자산에 접근하려 시도해 왔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채용 담당자 프로필을 작성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자금을 빼내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 해커들이 이런 수법으로 싱가포르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엔지니어를 표적으로 삼아 가상화폐를 빼내 가는 등 수십 곳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빼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고: 연합뉴스, 2월 22일 외)

- 1 러우 전쟁의 종전 움직임과 변화하는 국제정세가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의 종전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종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들 뿐 아니라 러시아에 많은 양의 군수품과 수천 여명의 군대를 파견했던 북한의 경제 및 대외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이 북러 밀착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향후 북핵 문제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선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을 통해 해당 지역과 한반도 모두 평화가 증진되도록,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북한의 문이 열리고 북핵 문제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 선교 현장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 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 종전 회담이 본격화되고 북중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관찰되는 등 정세 변화가 상당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의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정세와 그에 따른 파장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전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2025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WWL 2025)에서 최악의 박해 국가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 그리고 현장의 소식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강제북송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관련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과 북송된 신자들의 안전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 5 2025년 북한에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제9차 당 대회 등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이 내세우고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경

북한 기도 제목

제적 성과와 민생 안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건설 및 치적사업이 대부분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이 치적 쌓기와 전시 행정이 아닌 근본적인 주민들의 민생 안정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억압적인 정책이 바뀌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디지털 기술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자경제'를 내세우며 디지털 기술을 보급, 활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영을 효율화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간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 디지털 기술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돕는 긍정적 효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정책은 오히려 디지털 기술이 주민들에게 미칠 사상문화적 영향을 차단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을 더욱 철저하게 통제, 장악하려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통제의 도구가 아닌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래에 제 3국에서 탈북 여성들의 신변이 위협받는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탈북 여성들에 대한 행방을 엄격하게 추적, 관리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 여러 탈북 여성들이 불법적 수일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복송의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3국 탈북 여성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강제 복송이 하루 속히 중단되어 탈북 여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탈북 여성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주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신앙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8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사역자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010년대 이후 변화된 선교지 상황으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철수하였으며 뒤이어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분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현지인 동역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교환경에도 준비된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나가며 현지인 사역자들이 훈련되어 더욱 책임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월드와치리스트 2025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elation 3:2)

월드와치리스트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구성한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제를 사용해 기록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의 간수 및 심각성, 그리고 삶의 5개 영역에서 이들의 신앙 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월드와치리스트

1. 북한 2. 소말리아 3. 에티오피아 4. 리비아 5. 수단 6. 에리트레아 7. 나이지리아 8. 파키스탄 9. 이란 10. 아프가니스탄

11. 인도 12. 사우디아라비아 13. 미얀마 14. 말리 15. 중국 16. 몰디브 17. 이라크 18. 시리아 19. 알제리 20. 부르키나파소

21. 모로코 22. 라오스 23. 모리타니 24. 방글라데시 25. 우즈베키스탄 26. 쿠바 27.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8. 니제르 29. 투르크메니스탄 30. 니카라과

31. 멕시코 32. 오만 33. 에티오피아 34. 튀니지 35. 콩고민주공화국(DRC) 36. 부탄 37. 모잠비크 38. 카자흐스탄 39. 타지키스탄 40. 이집트

41. 카타르 42. 코모로 43. 카메룬 44. 베트남 45. 터키 46. 콜롬비아 47. 키르기스스탄 48. 브루나이 49. 차드 50. 요르단

51. 말레이시아 52. 아제르바이잔 53. 케냐 54. 네덜란드 55. 탄자니아 56. 러시아 연방 57. 지부티 58. 쿠웨이트 59. 인도네시아 60. 아랍에미리트 연방국

61. 팔레스타인 영토 62. 브룬디 63. 르완다 64. 온두라스 65. 도미니카 66. 바레인 67. 기니 68. 우크라이나 69. 앙골라

71. 베네수엘라 72. 우간다 73. 코트디부아르 74. 레바논 75. 간비아 76. 남수단 77. 벨로루시 78. 필리핀



2025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형식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월 7일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온라인	
	2	4월 14일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하충엽(숭실대학교)		
	3	4월 21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강디모데(엔케이피플)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5	5월 12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온라인	
북한 선교 현장	6	5월 19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온라인-대면 병행	
	7	5월 26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온라인	
	8	6월 2일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정인수(NKCCC)		
	9	6월 9일	DMZ 기도회			
	10	6월 16일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온라인	
	11	6월 23일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12	6월 30일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	온라인-대면 병행	
	13	7월 7일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 2		
	14	7월 14일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3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트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